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위원 : 이 상 근 교수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사회 A형

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정답 ③

1. 사회적 소수자

- (1)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2) 사회적 소수자의 예로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이 있다.

2. 사안의 검토

- ①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의미한다.
- ②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 ③ 사회적 소수자는 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강한 소속감을 갖는다.

문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 ① 경기 활성화
- ② 인플레이션 억제
-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정답 ①

1. 정책

(1)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지급하면서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

(2)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의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

(3)기업의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투자를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

(4)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정부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커질 수 있다.

2. 사안의 검토

위의 4개 정책은 모두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정답 ④

1.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하는 법인격이다.

2.사안의 검토

ㄱ. 기초지방자치단체

김해시와 성남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성남시 분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ㄴ. 주민소환

국민소환은 없지만 주민소환은 가능하다.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지방자치법)

ㄷ.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법률의 제정, 개정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다.

ㅁ.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헌법 117조, 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문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잣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④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사안의 검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만약 특정인이 추인을 하면 장래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특정인이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2 –

C. 예금
시중은행에 맡긴 예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5. 사안의 검토
① 상환기간
채권에는 상환기간이 있지만 주식에는 없다.
② 기대수익률
예금에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없지만 주식에는 있다. 따라서 예금보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다.
③ 발행주체
정부, 특수법인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소유지분을 분산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부, 특수법인 등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은 발행할 수 있다.
④ 이자
채권과 예금은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문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 ① 노년부양비는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으로 구한다.
- ② 고령화지수는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으로 구한다.
- ③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정답 ③
①노년부양비
$$\text{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노년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②고령화지수
$$\text{고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고령화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하지만 고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③ 2000년의 노인 인구
$$2000\text{년의 고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 33\%$$
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1/3임을 알 수 있다.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
$$2010\text{년의 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15\%$$
이고 고령화지수는 $\frac{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 66.3\%$ 이다. 고령화지수 공식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구하면 대략 65세 이상 인구 = $\frac{66}{100} \times \text{유소년 인구}$ 이다. 이를 노년부양비 공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frac{\text{유소년 인구}}{\text{생산가능인구}} = \frac{15}{66}$ 이 된다.
결국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문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부모의 계층(명)	자녀의 계층(명)			
	T년		(T+10)년	
상층(100)	상층	80	상층	90
	중층	15	중층	7
	하층	5	하층	3
중층(200)	상층	10	상층	30
	중층	160	중층	160
	하층	30	하층	10
하층(100)	상층	5	상층	5
	중층	10	중층	5
	하층	85	하층	90

- ①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많다.
- ③ (T+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정답 ④
① 계층 세습 정도
(가)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동일할 때 계층 세습이라고 한다.
(나)T년에서 상층 부모는 100명이고 자녀 상층은 80명이다. 중층 부모는 200명이고 자녀 중층은 160명이다. 하층 부모는 100명이고 자녀 하층은 85명이다. 따라서 T년에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한 계층은 하층이다.

② (T+10)년의 세대간 이동
(가)부모가 상층인 경우 자녀가 중층으로 7명, 하층으로 3명이 이동하였다. 즉 부모가 상층인 경우 세대간 하강 이동이 10명이다.
(나)부모가 중층인 경우 자녀가 상층으로 30명, 하층으로 10명이 이동하였다. 즉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간 상승 이동이 30명이고 세대간 하강 이동이 10명이다.
(다)부모가 하층인 경우 자녀가 상층으로 5명, 중층으로 5명이 이동하였다. 즉 부모가 하층인 경우 세대간 상승 이동이 10명이다.
(라)(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간 상승 이동은 총 40명이고 세대간 하강 이동은 20명이다. 결국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많다.

③ 계층 구조
(가)T년의 경우 자녀 세대에서 상층은 모두 95명, 중층은 185명, 하층은 120명이다. 따라서 T년의 경우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나)T년의 경우 자녀 세대에서 상층은 모두 125명, 중층은 172명, 하층은 103명이다. 따라서 (T+10)년의 경우에도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나타난다.

④ 세대내 이동
중층 부모의 자녀 중에서 T년에 상층이었던 10명이 (T+10)년에 중층, 하층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T+10)년의 상층 30명은 T년에 중층, 하층이었던 자녀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결국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문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답 ①
1. 박스의 검토
박스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검토
사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문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불신임권이다.
-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정답 ④

1.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한다. 권력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최소한의 견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최대한의 견제를 추구하고 있다.

2. 사안의 검토

의원내각제에서는 수상(총리)이 의회를 해산시킬 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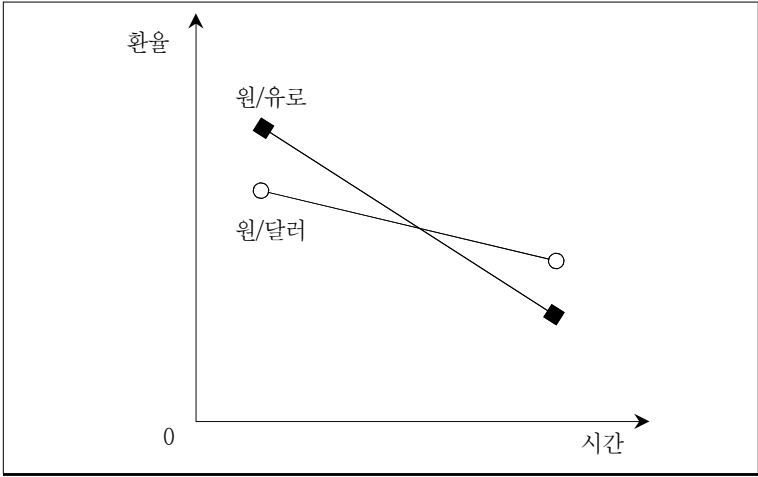
문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있다.

문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①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정답 ①

1. 환율

환율은 외환(달러, 유로)의 가격이다. 원/유로 환율은 유로의 가격이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2. 사안의 검토

① 원/달러 환율과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

달러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을 원화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환율×달러 차입금액)이다. 그림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② 원/유로 환율과 유럽 여행비

유럽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유로가 필요하므로 유로를 구입해야 한다. 그림에서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여 유로가 싸지고 있으므로 여행비 부담이 감소한다.

③ 가격 경쟁력

수입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환율×수입 자동차 가격)이다. 그림에서 원/달러 환율보다 원/유로 환율이 더 크게 하락하므로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이 더 싸다. 즉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환율과 국내 물가

수입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환율×수입 자동차 가격)이다. 그림에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수입 자동차의 국내 가격도 하락하여 국내 물가는 낮아진다.

문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 ①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정답 ③

지구의 남쪽은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식민지이어서 공업원료와 식량을 지배국에 싸게 판매하고 공업제품 및 자본을 비싸게 구입하였다. 따라서 남쪽은 빈곤하였다. 독립한 뒤에도 남쪽은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여전히 가난하였다. 따라서 위의 박스는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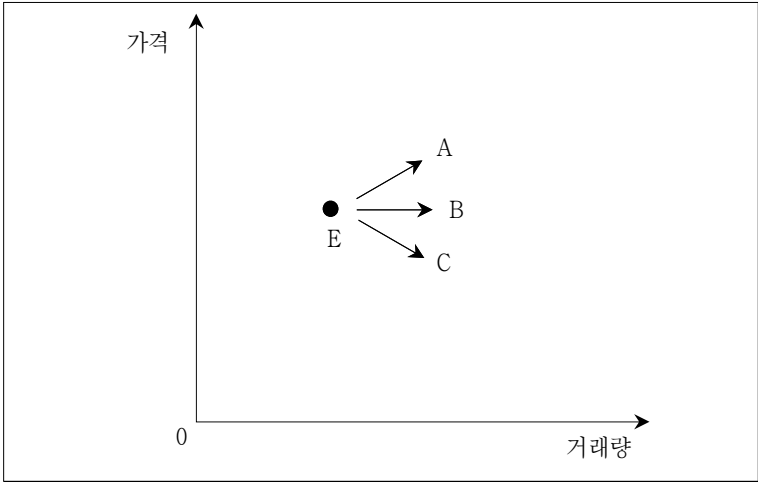
문 1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②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는 3억원을 기탁하면 된다.

문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④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상승하므로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점은 E점의 좌측 상방으로 이동한다.

② 소득 감소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점은 E점의 좌측 하방으로 이동한다.

③ 생산기술 향상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하므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점은 E→C로 이동한다.

④ 균형점의 이동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E→B로의 변화는 X재의 공급증가와 수요 증가를 동시에 수반한다.

문 1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구분	A	B	C	D
진입 장벽	없음	거의 없음	높음	매우 높음
경쟁 정도	←경쟁이 심해짐		경쟁이 약해짐→	

- ① A: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 ② B: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 ③ C: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 ④ D: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정답 ②

1. 박스의 검토

A.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경쟁이 심하다.

B. 독점경쟁시장

독점경쟁시장에도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서 경쟁이 심하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덜하다.

C. 과점시장

과점시장에는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생산자, 공급자가 소수이다.

D. 독점시장

독점시장에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므로 생산자, 공급자가 1명이고 경쟁이 없다.

2. 사안의 검토

독점경쟁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상품의 차별성이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 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 결정된다.
-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1. 박스의 검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대통령령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사안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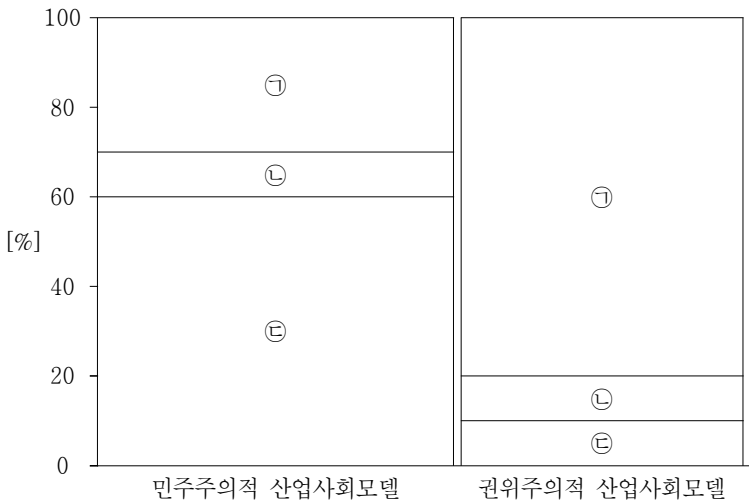
①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입법(대통령령)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대통령은 조만간에 군법무관 보수에 대한 대통령령을 규정해야 한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없다.

③ 헌법소원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된다.

④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배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국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을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한다.

문 20. 그림은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 (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

정답 ①

1. 그림의 검토

㉠이 권위주의 산업사회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신민형 정치문화이다.

㉡은 민주주의 산업사회와 권위주의 산업사회에서 모두 비중이 작다. 따라서 ㉡은 지방형 정치문화이다.

㉢은 민주주의 산업사회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2. 사안의 검토

	정치 체제	투입 대상	산출 대상	정치적 자아
지방형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신민형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참여형	높음	높음	높음	높음